

“항만은 수출 최일선, 자부심 커… 안전경영 전사적 노력”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한승항만물류산업 박진기 대표

40피트(ft) 컨테이너 한개 무게만 약 20톤(t)이다. 항만에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들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오간다.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는 크레인 은 아파트 20~30층 높이와 맞먹는다. 곳곳이 위험요소다.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한승항만물류산업을 이끌고 있는 박진기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항만 터미널에선 안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침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기를 바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늘 하루를 시작한다. 항만은 수출의 최일선에 있다. 경제의 시작이자 종착지가 바로 항만이다.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이지만 이곳을 지키며 일하고 있다는 자책이 자부심이다.”

한승항만물류는 2022년 2월에 컨테이너 운송 관리, 컨테이너 터미널 장비·운영 및 도급업무에 대해 ‘국제공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박진기 한승항만물류산업 대표가 부산 신항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컨테이너 운송관리 등 IOS 인증
매일 새벽 5시20분에 일과 시작

2003년 태풍 매미에 ‘사업 위기’
‘자동화 탈바꿈’ 전화위복 계기로
2년연속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를 받았다.

이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회사가 그만큼 안전경영에 집중하고, 국제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해 선진화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전 사업장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증서는 관련업계, 특히 중소기업에선

받기 쉽지 않은 ‘증표’다. 그만큼 전사적으로 ‘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매일 새벽 5시20분 전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전날 과음을 했어도 이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항만 업무의 특성상 밤새 있었던 특이사항과 당일 진행할 업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다. 현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대표가 응답해주는 것이 바로 안전의 시작인 셈이다.

박 대표는 2002년 한승항만물류 전신인 한승Y/T육운을 설립했다.

직전까지 다니던 물류회사가 IMF를 겪으면서 핵심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아웃소싱하기 시작, 아예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첫 사업 아이템은 컨테이너터미널 장비운영 도급이었다. 그후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컨테이너), 항만장비 정비, 시설관리, 냉동컨테이너 운영, 컨테이너 하역 장비 및 팔레트 상·하차 장비 임대, 코일 상·하차, 건물위생·시설관리와 같은 종합용역관리 등 항만분야 사업을 점점 다각화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태풍으로 위기를 겪었다. 진짜 태풍이었다. 2003년 당시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항만에 있는 크레인들이 모두 쓰러진 것이다.

복병을 만났던 박 대표는 자동화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시류에 편승, 새로운 기회를 잡으며 위기를 넘겼다.

정신없이 달리다보니 한승항만물류는 인원 기준으로 동종업계 10여개 회사들과 비교해 수위를 차지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항만장비 운영부터 컨테이너터미널 총괄 위탁 운영이 가능한 대표적인 회사로 손꼽힐 정도로 명성도 얻었다.

박 대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신항 6부두는 자동화율이 현재 88%까지 도달했다. 항만 운영은 빠른 처리

속도와 안전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에 관해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한승항만물류는 현재 부산(BCT) 뿐만 아니라 울산(UNCT), 인천(CNCT)에서도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물류와 신항물류센터 확보, 3PL(3자 물류) 진출, 하역업 진출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엔 회사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회사가 두번째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례적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가는 직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업무강도가 올라가고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비용과 직결되지만 인력을 여유롭게 운영하면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고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좋은 기업(Excellent Company)’을 경영 목표로 달리고 있는 박 대표와 한승항만물류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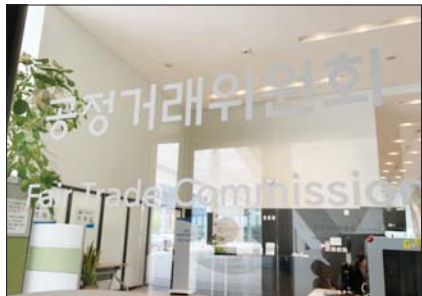
공정위, 손해책임 전가 등 캐피탈사 불공정약관 7개 시정

공정위, 대출업무 약관 심사 이의제기 금지 등 관행 제동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사고 시 대출모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8개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A사는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고, 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는 ‘모집인의 부당행위로 구매자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한 경우 모집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모집인은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니라 그 이행을 감독 또는 보조하는 자”라며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2021년 7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피탈사가 대출금을 고객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위탁계약서에서는 모집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않음에도 대출사고 발생 시 종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책임을 모집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며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캐피탈사들은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에 삭제했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 또는 수정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코웨이 코디 위한 ‘비상벨’ 운영

코웨이가 코디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8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상벨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방문판매 및 점검 서비스 특성상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코디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 신고 시스템이다.

비상벨 시스템은 코디가 업무용 앱 내에서 비상벨 버튼을 클릭하면 코디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담긴 문자창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해당 문자 발송 시 경찰에 즉시 신고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김승호 기자



동화기업 가구 마감재 ‘디하임’ 출시

동화기업이 가구 마감재 및 도어재 ‘디하임’ (사진)을 출시했다. 디하임은 회사가 자체 생산한 친환경 E0 등급 보드로 제작한 제품이다. 유해 물질로 인한 실내 공기질 저하와 새집 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다. 디하임 패턴은 가전 제품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인테리어에 통일감을 준다. 소비자 선호가 지속적으로 높은 색상 10종을 준비했다.

/김승호 기자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회피기업… “무관용 원칙 확립”

고용부, 충남 소재 기업 2곳 적발

5인 이상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는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00명 규모 한 제조업체는 사업이 어렵다며 직원 상여금은 체불하면서도, 대표이사과 그 가족에게만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과 충남 소재 두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온 A 업체는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A 업체는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다른 충전소의 경우도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 대해 1억82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와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근로자 100여 명이 종사하는 충남 소재 B 제조업체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이사 본인과 가족에게만 고액의 급여를 줬다. B 업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B 업체는 2021

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B 업체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총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돼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